

한중경제포럼

제19-01호 2019년 3월 29일

2019년 중국 거시경제 현황과 정책 동향

2019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2019년 중국 거시경제 현황과 정책 동향
2. 일 시: 2019. 2. 21(화) 16:00~18:00
3. 발표자: 국가정보센터 판젠핑(范剑平) 수석이코노미스트

1. 중국경제 현황

□ 2019년 중국경제는 '안정'과 '개혁'에 중점

- 2019년 중국경제에 대한 당 중앙의 가장 근본적 요구는 '안정'으로 볼 수 있음.
 - 2019년 중국의 경제정책은 '신중국 건국 70주년과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관건적인 한 해'라는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6가지 안정'을 거듭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총수요 안정(稳定总需求)'을 제시함.
- 또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개혁은 '전 세계가 100년 만에 맞닥뜨릴 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정세 속에서' 개혁 만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음.
-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음.
 - 1978~2011년 중국의 GDP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9.8%를 기록했는데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이 20년 연속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 사례는 많지 않음.
 - 한편 중국은 빈부격차 확대 속도도 빠른 편인데 지니계수는 1982년의 0.249에서 2008년의 0.491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면서 2016년에 0.465 기록

그림 1. 중국경제 성장방식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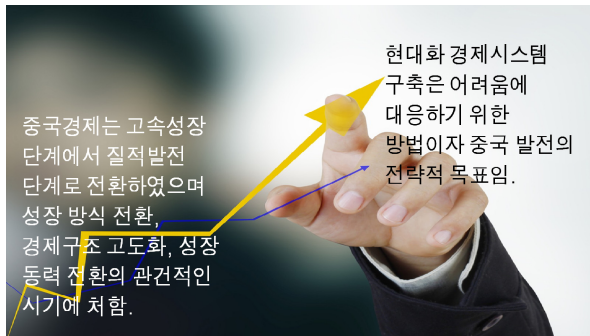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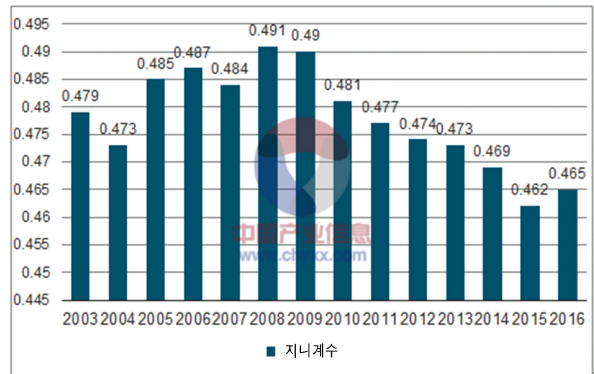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지니계수 추이



□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략적 목표 달성

- 중국은 △ 2020년 전면적 샤오강 사회 건설 △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국가 발전 목표로 설정
 - 상기 목표 실현을 위해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임무로 하고, 생산력을 높여 안정적 경제기반 구축 필요
 - 또한 현대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며, 질적 발전을 통해 경제력과 종합 국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 '3개 특별업무' 중 최우선은 리스크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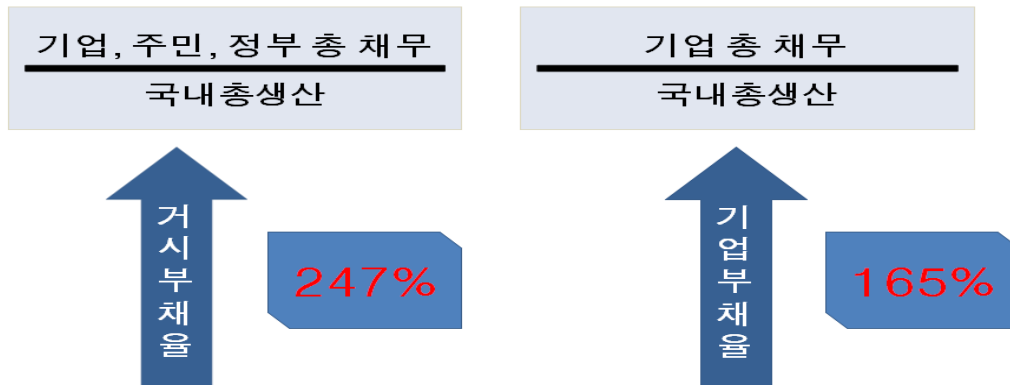
- 19차 당대회의 요구에 따라 향후 3년간 전면적 샤오강 사회 건설을 위한 리스크 해소, 탈빈곤, 오염방지 등 '3대 특별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
 - 그중 리스크 방지의 중점은 금융 분야
 - 공급측 구조 개혁 위주로 금융과 실물경제, 부동산, 금융 시스템 간 선순환을 형성하고, 주요 분야의 리스크 방지를 강화하며, 법과 규정을 위반한 금융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관리감독 제도 구축을 강화

□ 금융 레버리징과 고속성장의 명과 암

- 전 세계 GDP 대비 금융 부가가치 비중은 약 4%이며, 이미 중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추월
 - 서방국가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금융업 비중은 경제위기의 도래를 의미함. 예를 들어 일본은 1990년에 금융 비중이 6.9%에 달했는데 이 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함. 미국은 2001년에 금융 비중이 7.7%를 기록한 이후 인터넷 버블이 붕괴되었으며, 2006년 7.6% 기록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
 - 2005년 중국 금융의 GDP 내 비중은 4%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4%와 7.9%로 급등함.
- 중국의 실질 주민 부채율은 미국을 초과함.
 - 2008~2017년 중국의 주민 부채율이 17.9%에서 49%로 2.7배 확대되고, 2017년 중국 주민의 채무액은 40조 5,000억 위안으로 GDP의 49%(82조 7,000억 위안)에 달함. 중국의 주민 부채율은 국제 평균수준(62.1%)과 비할 때 높은 편은 아니나 신흥국가(39.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 전체 가처분소득 대비 주민 채무 비중은 실제 채무 부담율을 더 잘 나타냄. 2017년 중국의 동 비중은 112.2%

로 2008년의 43.2%에 비해 10년 사이 69%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평균 수준 뿐 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을 상회함.

그림 3. 2016년 중국 거시경제 부채율



- 중국의 지나치게 높은 거시 부채율은 과거 고속성장을 추구하면서 통화 총량의 효과적인 통제가 되지 않은데 기인함.
 - 리스크 형성 기간산업과 지방정부는 성장을 위해 ‘금융완화’를 선호했으나, 이와 동시에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 통화·사회용자총량으로 인해 시장 주체 예측에 착오가 생기고 자산 버블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16% 내외였으나 2017년과 2018년은 8.1%로 하락함.
 - 지난 12월말 광의통화(M2) 잔액은 전년대비 8.1% 증가하여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협의통화(M1) 잔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증가율은 전년대비 0.3%p 하락함.

□ 성장동력의 전환, 요소투입에서 혁신주도로 전환

- GDP 대비 기업의 R&D 지출 비중을 경제 성장 방식 전환과 혁신주도의 중요 지표로 삼음.
 - 중국은 2010년 1.75%로 ‘11.5 시기’ 목표(2%)를 달성하지 못했고, 2015년에 2.06%로 ‘12.5 시기’ 목표(2.2%)를 달성하지 못함.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2.08%와 2.12%를 기록함.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 강요 (2006~2020년)」에서 확정한 ‘13.5 시기’ 목표(2.5%)를 달성이 쉽지 않음.

2. 2019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 거시정책 동향

- 거시정책은 역주기 조절을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사전 조정과 미세 조정 적시 추진, 총수요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 효과를 확대하고 보다 더 대규모 감세와 비용 감소를 실시하며, 지방정부의 특별 채권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야 함.

- 안정적인 통화정책은 적절히 완화하여 합리적인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직접융자 비중을 향상시키고 민영기업과 소형기업의 자금난과 조달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구조적 정책은 체제와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고 개혁을 동력으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조세금융, 토지, 시장진입, 사회관리 등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빠른 성장을 장려해야 함.

□ 통화정책: 통화안정, 신용대출 완화, 선별적 통화완화 추진

- 통화정책의 핵심은 여전히 통화정책의 전달메커니즘 개선, 직접 융자 비중 제고, 민영기업과 소형기업의 자금난과 높은 조달비용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임.
-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목표로 하면 기준율 인하 필요성이 금리인하보다 큼.
 - 이는 기준율 인하를 통해 은행의 대출공급 의사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금리인하는 주로 기업과 주민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통화정책이 원활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은행 리스크 부담 감소, 부채비용 상승 및 관리감독의 심사 압박 등으로, 기업의 신용대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

□ 재정정책: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킴.
 - 공급측 구조개혁의 비용감소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가치치세 등 조세를 실제로 감소, 소형기업·과학기술형 스타트업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 면제를 실시, 실제상황에 따라 사회보험 명목 납부 비율 감소, 행정 간소화 및 기업 관련 비용 수취 감소 등을 추진함.
- 정책 실시 방식을 개선함.
 - 정책 조율성 강화, 관련 부대조치 제정, 민영기업이 정책을 통해 이득을 보도록 함.
 - 과잉생산 해소와 부채율 감소 등과 관련해서 모든 소유제 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미시주체 활성화 추진

-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 중소기업의 발전 장려, 민영기업가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
-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은 모두 시장을 통해 조정,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하도록 함.
- 그 외 '일부 국유자본을 사회보험 기금에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감소 등 조세·비용 감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3. 중국경제가 직면한 과제 및 발전방향

□ 중·미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함.

- 1500년 이후 신흥 대국이 패권국에 도전한 사례는 총 15차례로, 그중 11차례는 전쟁을 통해 결론이 남.
- 중·미 무역분쟁은 지속될 것이며, 분쟁 분야가 기술특허, 금융, 환율 등으로 확대될 것임.
 - 하지만 지역안보 분쟁만 제대로 통제한다면 중·미 군사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
 - 중국은 2035년 경 GDP 규모가 미국을 초과하겠지만 1인당 GDP는 여전히 미국 1인당 평균 수준의 25%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75%에 미치지 전까지 여전히 후발국가 우위 잠재력을 가진.
- 미국은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공급사슬을 중국으로부터 이전시키는 노력 중임.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접근에서 억제로 전환함.
 - 새로운 전략은 정치 차원의 보수주의와 외교 차원의 공격적 현실주의의 결합이며, 핵심목표는 각종 수단을 통해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억제하고 미국의 영향력 감소 속도를 늦춰 대응 전략 준비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임.
- 중국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정하고 자국 우위에 입각하여 대규모 개혁을 통해 빠르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야만 미·중간 협력 및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트럼프는 향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억제라고 밝힘.
 -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미국 패권주의 길 및 내재적 논리에 따라 트럼프는 향후 중국도 미국처럼 패권 지위를 확립할 것이라고 판단함.
 - 억제 전략은 ① 직접 전쟁 시작(실시가 어려움) ②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초래(전쟁보다는 좋은 방법이나 반드시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더 큰 손해를 보고, 미국은 새로운 무역파트너로 대체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어려움) ③ 롤백(roll-back) 전략(미국이 중국 주변국 대상으로 반중 지도자를 출범시키고 티벳과 신장지역의 불안정을 초래시키는 것으로 이는 과거 냉전시기에 취했던 전략임) 등 3가지로 구분

□ 중상위 소득단계에서는 고속성장이 불가능

- 국민총소득 GNI와 국내총생산 GDP는 다름.
 - 2016년 중국 GDP는 전년대비 6.7% 성장한 74조 4,000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불변가격 기준에 따른 GDP 증가량은 4조 6,000억 위안으로 2015년(4조 4,000억 위안) 대비 약 1,600억 위안 초과
 - 2016년 GNI는 6.9% 증가하여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는데 이는 소득 증가율이 생산증가 둔화로 인해 하락하지 않았고, 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음을 의미함.
- 1인당 GNI를 기준으로 △ 1만 2,736달러 이상 되면 고소득 국가 △ 4,126~1만 2,735달러는 중상소득 국가 △ 1,046~4,125달러는 중하소득 국가 △ 1,045달러 이하는 저소득 국가로 구분
 - 중국은 2010년 중하소득에서 중상소득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2015년 기준 1인당 GNI는 7,880달러를 기록

□ 중국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

- 국제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을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가 넘을 경우 ‘고령 사회(aged society)’, 21%가 넘을 경우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로 구분
 - 중국은 200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었으며, 2027년에는 14%를 초과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47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청년인구 급감과 노인인구 비중의 급증
 - 1990년대 출생 인구는 1980년대 대비 23.2% 감소했으며, 2000년대 출생 인구는 1980년대 대비 35.9% 감소
- 2017년, 중국 인구 보너스의 종료
 - 2017년 중국의 노동인구(16~59세)는 9.02억 명으로 전년대비 548만 명 감소(2016년 대비 약 200만 명 감소)했으며, 6년간 2,344만 명이 감소
 - 중국의 노동인구수는 2011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74.5%에서 2016년 65.6%로 하락

그림 4. 제6차 인구조사(단위: 억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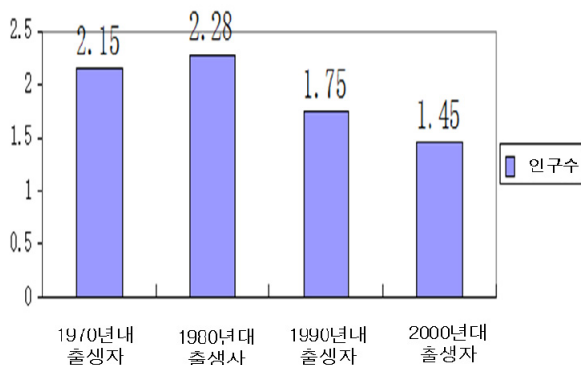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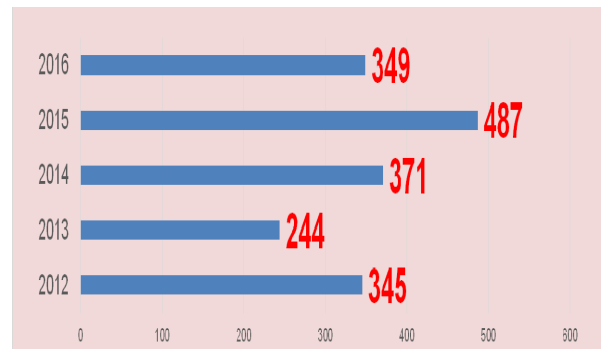


그림 5. 매년 감소하는 노동인구(단위: 만 명)



- 노인부양비의 급등과 인구보너스의 감소
 -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동자 퇴직연령 기준(여성 55세, 남성 60세)을 유지할 경우 2020~2030년 중국 노동인구는 연간 700~800만 명 가량 감소
 - 중국인의 평균수명은 1970년대 60세에서 2015년 76.3세로 증가
 - 만 60세 이상 인구수는 2억 4,949만 명으로 총인구의 17.9%이며, 그중 만 65세 이상 인구는 1억 6,658만 명으로 총인구의 11.9%를 차지
- 실망스러운 인구조정 정책 효과
 - 국가위생계획위원회는 2013년 ‘두 자녀 정책(单独二胎)’ 실시 초기 ‘매년 200만 명 정도의 인구 증가’를 예상했으나 5년 간 목표 달성에 실패
 - 2014년에는 전년대비 47만 명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32만 명 감소 기록했으며, 2016년 전년대비 131만 명 증가, 2017년 전년대비 63만 명 감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00만 명 감소를 기록

□ 신시대의 희망은 인구의 질적보너스 개발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는 인적자본 수준 향상이나 기술혁신을 통해 보완 가능
 - 중국은 개혁을 통해 인구의 '질적 보너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특히 개인과 기업 혁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제거하여 '만중혁신', '개개인 혁신'의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고 '체력+지력', '제조+혁신'을 통해 선진기술 나아가 혁신기술을 개발할 경우 중국은 보다 더 많은 가치 창조와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
- 인적자본 개발 필요성 증가
 - 중국인의 평균 교육 수준이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
 - 특히 20~24세 인구 고등교육 비중이 1980년 0.9%에서 2010년 26%로 향상되면서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보다도 높아짐. 2016년 고등교육 총 입학률은 42.7%로 전년대비 2.7%p 향상됨.
- 중국 제조업의 호재는 엔지니어 보너스
 - 지멘스 이사회의 2004년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华为)의 비용 우위는 주로 저렴한 R&D 비용에 기반
 - 화웨이 R&D 인력의 1인당 비용은 연간 2만 5,000 달러 수준으로, 유럽기업(연간 12만~15만 달러)의 1/6 수준
 - 화웨이 R&D 인력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약 2,750시간으로 유럽 R&D 인력의 연 평균 근무시간(약 1,300~1,400 시간, 주 평균 35시간이나 휴가일이 많음) 보다 2배가 많음.
 - 2004년 중국의 저임 엔지니어 인적비용(시간당)은 유럽과 미국 동일한 수준을 가진 엔지니어의 1/12, 2015년에 1/10으로 나타남.

□ 제조강국 건설과 차세대 고성장성 기업 육성을 추진

- 선진제조업 발전을 추진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중·고급 소비, 혁신주도, 녹색·저탄소, 공유경제, 현대 공급사슬, 인적자본 서비스 등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
- 세계적 수준의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를 여러 개 육성
 - 2019년 5G 상용화 추진, 인공지능, 공업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 강화, 도시간 교통, 물류, 도시 인프라 등 투자 확대, 농촌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 등을 중점 추진

□ 중국 공업용, 서비스용 로봇 수요 급증

- 2016년 전 세계 공업용 로봇은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28만 대를 기록했으며, 그 중 중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8.5만 대 기록
 - 2017년 중국 공업용 로봇 판매량 10만 2,000대, 보유량 45만 대
- 중국 로컬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의 5% 미만에서 2017년의 30% 이상으로 증가
- 전 세계 공업용 로봇 시장규모는 2016년에 400억 달러 수준이며, 2022년에는 2016년 대비 2배 확대 예상

□ 인공지능 위주 기술혁명의 신시대에 적극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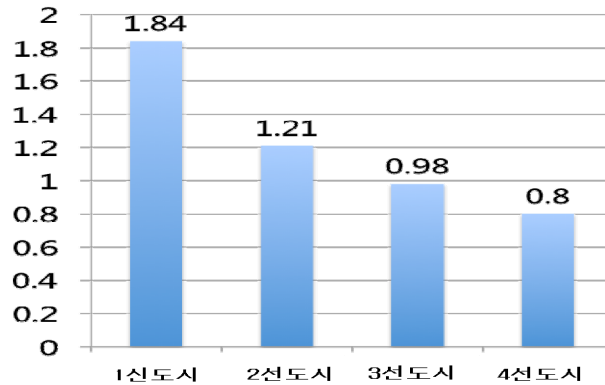
- 인공지능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

-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슈퍼 컴퓨터, 사물인터넷, 뇌과학 등 새로운 이론과 기술이 이끄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딥러닝, 다분야 융합, 인간·기계 협동, 스마트 개방, 자율규제 등 새로운 특징을 보이면서 경제 및 사회 발전, 국제 정치경제 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는 중국이 전 세계 과학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자 중국 과학기술의 도약, 산업 고도화, 생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자원
- 인공지능은 여러 학문의 종합, 고도의 복잡성 등의 특징
 - 연구개발, 통합 계획, 협동 혁신을 통해 원천 혁신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차세대 인공지능의 발전 토대를 마련
 - 초이론 연구를 강화하고 과학자가 인공지능 선진 기술분야를 탐색하도록 지원하며, 인공지능 발전 방향과 이론, 방법, 수단, 시스템 등 분야에서 혁신적·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 중국이 인공지능 이론연구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핵심기술 위주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전면 강화하고 차세대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일반성 기술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인공지능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함.
- 10년 후 일자리 절반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
 -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전 세계 노동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며, 저기술 업무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15개 주요 국가에서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전 세계 노동시장의 65%) 감소 예상
 - 스탠포드대학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교수는 미국에 등록된 720개 직업 중 47%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
 - 향후 10년간 로봇이 약 1,5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고용시장의 10%에 해당
 - 중국은 로봇으로 대체되는 일자리가 고용시장에 70%를 초과할 전망
- 하지만 기술혁신으로 촉발된 실업은 일시적인 것이며, 직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
 - 예를 들어 과거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하면서 마부가 실직했지만 머지않아 자동차 기사로 재취업

□ 부동산 부양책이 아닌 새로운 발전이념을 실시

- 19차 당대회 보고서 제5부분 ‘현대화 경제시스템 구축’에서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1)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2) 혁신형 국가 건설, 3) 농촌진흥 전략 실시, 4)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전략 실시, 5)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 6) 전면 개방된 새로운 구조 형성 등만 언급
- 부동산은 제8부분 ‘민생 보장과 개선 수준 제고’의 제3절 ‘사회보장 시스템 건설’에서 언급
 - △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발전 메커니즘 구축 △ 주택은 투자대상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입장을 견지 △ 도시별 정책을 차별화 △ 지방 정부의 책임소재 명확화 △ 주택시장 시스템과 보장시스템 완비
- 인구이동에 의해 부동산시장의 지역분화가 결정
 - 미래 수요 잠재력을 대표한 상주 호적 인구 비중을 보면 1, 2선 도시는 인구 유입형으로 상주인구가 호적인구를 훨씬 초과하고 3, 4선 도시는 인구 유출 현상이 극심하고, 상주인구가 호적인구보다 적음.
- 도시 서비스업의 발전수준이 취업기회 및 인구 유입 규모,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공급수요 여건 등을 결정
- 도시 혁신형 기업의 발전수준이 차세대 부호의 자산 집중 능력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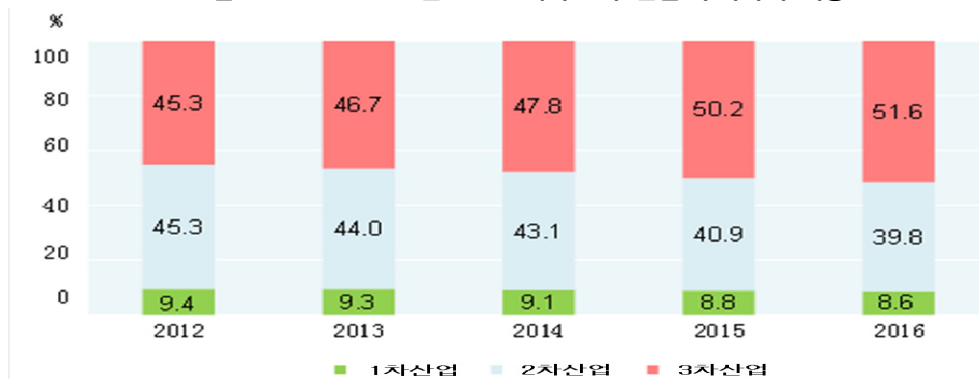
그림 6. 2012년 호적인구 대비 상주인구 비중



□ 인구 집적능력 지표는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에 의해 결정

- 2016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7.8% 증가, GDP 대비 비중은 51.6%로 전년대비 1.4%p 증가
 - 이는 주로 서비스업 발전 정책 실시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달한 후 나타난 현상
 - 특히 인터넷이 각 업종과 융합되고 서비스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이며, 제조업도 생산형 서비스업이 빠른 증가세

그림 7. 2012~2016년 GDP 대비 3차 산업 부가가치 비중



□ 인재/자산 집적능력 지표는 GDP 대비 기업 R&D 지출 비중에 의해 결정

- GDP 대비 기업 R&D 지출 비중은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혁신추동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
- 향후 스마트 사회로 전환되어 일반 노동자의 체력이 아닌 지식과 혁신능력을 겨루는 사회로 전환될 것
- 동 시기에 대규모 '스마트 로봇'을 사용할 경우 양극화가 더 극심해질 것이고, 서방국가의 제조업 비용이 저렴해지면 산업은 다시 서방으로 이전되고 중국은 제조업 공동화 현상 발생 가능성이 증가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숙련된 노동자와 혁신형 기술인력을 육성해야 할 것임.

□ 새로운 발전이념 실시 이후 부동산은 새로운 구조가 형성

- 총인구수와 연령 구조에 의해 결정된 부동산 총수요 증가 속도가 현격하게 둔화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의 지역 이동이 향후 부동산의 국부적인 핫이슈를 결정
-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방지가 부동산 융자 비용 수준을 결정
- 실물경제 발전을 핵심으로 한 경제전략 조정에 의해 부동산업이 사회 평균 이익 산업으로 회귀할 전망
- 부동산업의 산업집중도가 현격하게 높아지고, 지역기반 중소 부동산기업은 점차 퇴출될 전망

질의응답(Q&A):

Q 1. 부채 감소와 관련해서 기업 보다 주민의 가계부채를 더 강조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기업부채를 더 많이 언급함.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수출과 투자 증가속도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것임. 하지만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억제, 장기 소비둔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만약 가계부채의 지나치게 빠른 증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내수 소비 진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 2019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하는가?

A 1. 2019년도 소비 진작 정책 방향은 이미 발표됨. 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농촌소비 장려정책을 취함. 그 중 자동차 소비 진작 정책은 도시에서 이미 실시한 적 있는데 그 결과 2018년도 중국 자동차산업은 성장이 정체된 상황임. 개인적으로 2019년 농촌 자동차 소비 진작 정책 실시효과는 이상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농촌에서 자동차 소비가 가능한 소비자가 많지 않고, 구입하더라도 저가의 자동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자동차 구입능력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보조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도 실제사용은 도시에서 할 가능성이 큼. 개인적으로 소비 진작 정책은 소비를 사전에 촉진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상업규칙을 벗어남. 자동차 업체도 중국정부의 자동차 소비 진작 정책 실시를 그다지 원하지 않음.

기업부채 감소와 관련해서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정책을 계속하여 유지할 것임.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중국정부가 부채 감소 관련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경제에 큰 변동이 생기고 특히 민영기업이 큰 손해를 보게 됨. 2018년 하반기부터는 기업부채 감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채 상황을 유보하고, 채무 상황을 독촉하지 않으며 기업 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함.

따라서 2019년도 1월 중국의 대출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대출의 80%는 어음융자 대출이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제공함. 대출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도 주문 계약서나 기타 담보물, 혹은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결제대금 증빙서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최근 대출 증가는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과거 대출의 상환 용도로 많이 사용됨. 남은 20%는 중장기 대출로 주로 주민의 부동산 대출이며, 기업 투자용 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음.

주의할 점은 중국의 경영상황이 좋은 기업은 자금이 부족하지 않음. 예를 들어 5G, 생명과학, 인공지능 등 분야의 기업은 풍부한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그들이 부족한 것은 기술임. 이러한 기업은 주식발행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현재 중국의 기업부채가 높은 분야는 전통산업임. 향후 5G 환경이 조성되면 인공지능 응용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신기술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부문의 부채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금융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정부부채를 적극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용자도 제한을 받았음. 따라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증가율은 2017년의 19.9%에서 2018년의 3.8%로 급락함. 2019년은 중국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프라 투자증가율이 10% 이상으로 회복될 것임. 부동산 투자는 2018년에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도에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임. 즉 2019년도에는 인프라 투자가 재차 증가세를 보이고 부동산 투자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밖에 주장삼각주(珠三角), 창장삼각주(长三角), 환베이징(环北京)지역에서 3년 뒤 5G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로봇, 인공지능 등 관련 공업 투자가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Q 2. 2018년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6.4%였는데 외부에서는 중미 무역과 상관없이 중국경제가 어렵고 특히 기업의 높은 부채율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함. 현재 부동산과 개인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5G 등 신경제 성장이 전통산업의 둔화를 보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국유기업과 전통산업의 생산성이 둔화되고 신경제 분야는 중미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기술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정책의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또한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 둔화를 보완하려고 하지만 이 방법 이외 기업의 높은 부채율 등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정책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기업부채의 전망은 어떠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 2. 부채는 정부, 기업, 가계부문으로 나뉘 볼 수 있음. 우선 중국의 가계부문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가계 부채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가장 높은 편임.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임. 중국은 부동산 구입 시 선납 비중이 큰데 대출 미상환시에는 법원에서 주택을 압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선납한 금액도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지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당장 대출 상환이 불가하다면 시간을 일정정도 연장시킬 수도 있음. 따라서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리스크는 크지 않음.

정부부채와 관련해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비중이 230%이고, 중국은 은폐된 부채를 추가해도 100%를 상회하지 않을 것임. 또한 지방정부 부채는 그리스나 스페인 등 국가와는 달리 주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미 자산을 형성하였음. 따라서 중국의 정부부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다음으로 중국기업의 부채 비중이 높은 주요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 기업자금 조달은 은행에만 의존했기 때문임.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정부가 주식시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이를 통해 더 많은 중국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기업 부채율은 하락할 것임. 또한 기업 부채감소 시간을 연기하여 적절한 시기에 부실채무를 처리해야함.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부실자산을 처리하면 자산가격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큼. 약 3년 뒤 중국경제가 안정되면 이러한 부실자산을 보다 더 공정한 가격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경기가 호전세로 바뀌면 부실자산을 현재보다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중국정부는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과거 금융기관의 이익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중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양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는 중국정부가 이해득실을 따진 후 내린 결정임. 만약 다수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제 전반에 모두 큰 충격을 가져다줄 것임. 따라서 중국정부는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않고 이자를 어느 정도 감면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는 중국정부가 기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임시적 조치임. 아울러 중국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 통상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은 상당히 늦는 편임.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을 6개월 사이에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향후에는 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로 단축시킬 수도 있음. 이는 중국정부가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그 외 현재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은 기업에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상업은행은 금융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대출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과거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 시 민영기업에 대한 미결제 공사대금을 빠르게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즉, 은행을 통한 자금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를 통해 자금이 실물경제에 유입되도록 함. 이러한 조치는 2019년에 중국정부가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취한 중요한 재정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Q 3. 출산율 감소에 대해 중국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정부나 언론매체에서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A 3. 중국정부는 현재 인구문제가 신생아 출산율을 비롯한 인구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함. 즉, 노인 수 증가에 따라 양로금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노동자 부족 문제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할 수 있고 실업 압박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임.

현재 중국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정부는 출산의 선택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줄 것이고 신생아 출산문제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임. 중국정부는 교육과 양로 관련 인프라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 결론적으로 중국정부는 인구수보다는 인구구조와 인구의 질적 발전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